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0월 소비자동향지수

기획 정보

농업·농촌 관련 주요 지표 동향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유제품류 시장 현황
전국 농지실거래 가격 정보 제공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 본 자료는 2013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식약처 협업으로 식육가공산업 육성 나선다. - 축산물 전 부위의 고른 소비 촉진으로 가격 안정 도모, 손톱 밀 가시 뽑기, 부처간 협업(농식품부-식약처) 사례 창출 -」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식육가공품 개발·소비 활성화를 통해 **식육의 수급 및 가격 불균형 개선, 식육가공 산업 발전 도모**

- 식육(돼지고기 등) **부위에 따라 선호 편차**로 수급 및 가격 불균형, **육류 전체 소비 중 식육가공품 소비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 삼겹살·목심 등 구이용 중심으로 소비되어 가격편차 발생, 앞다리 등 저지방 부위 재고 부담을 삼겹살 가격에 전가 경향

※ 돼지고기 부위별 소매가격('13.2월): 삼겹살 1,789원/100g 목살 1,750, 앞다리 1,109, 뒷다리 803

※ 1인 육류 소비량 40.5kg 중 가공품 4.1kg(10.1%), 독일 50%, 일본 15%

○ **[현황 및 문제점]** 소비형태가 주로 신선육(구이용 등)이며,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생산은 22%** 수준

※ '11년 식육가공업체 2,329개소에서 724천 톤 생산

- (식육처리업체) **저지방부위 재고부담 크고, 안정적 판매처 발굴 애로**

- (대기업 위주) **대기업 위주** 대량 소품목 생산구조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제품 개발 및 고품질 소량 생산 등에 한계, 식육판매점에서 간단한 비열처리 가공품 판매가 어려운 상황**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 지원

※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위생·안전기준 강화,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

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보장

- **[시설자금 지원]** 식육가공품 제조·판매하는 영업장 설치하려는 자에게 건축비·가공설비·저장시설·판매시설 등 지원
 - 1개소 당 10억 원 이내 지원(재원: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자금 200억 원)
 - ※ 지원조건: 융자 70%, 금리 3(생산자)~4%(일반업체), 5년 거치 10년 상환
- **[운영자금 지원]**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제품검사비용 등 지원
 - 1개소 당 2억 원 이내 지원(재원: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240억 원)
 - ※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3~4%, 1년 거치 일시상환
- **[전문인력 육성]** 식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 ※ 식육처리기사: 자격제한 없음, 1차 육가공(도체 발골, 해체 등) / 식육처리기사: 관련 대학 졸업, 일정기간의 실무경력(3년 등), 2차 가공기술(햄·소시지 제조) 등의 요건 검토 중
- **[소비홍보, R&D, 수출 지원]** 식육가공 분야의 R&D 투자 확대, 민관합동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식육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추진
 - ※ '식육정보종합센터' 설치 검토(중장기) / 식육가공 R&D 투자 확대: ('12) 36.9억 원 → ('13) 40 → ('14) 45

기대요과

- **[수급 불균형 개선 및 축산물 가격안정]**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확대로 수급 불균형 개선 및 축산물 가격안정 효과
 - 식육가공품판매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상시재고물량(저지방 부위 연간 15,600톤) 활용, 가공품 제조판매(연 21,600톤)
- **[지역활성화]**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 대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식육판매업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세업종(평균 연매출 1.2억 원)
 - ※ 식육의 단순절단 판매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활성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 ※ 1천 개소 개설 시 규모별로 2~4명, 일자리 3,000개 창출 예상

주요 농정 이슈_2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

※ 본 자료는 2013년 1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개요

- **[시행]** 유기가공식품의 관리체계 일원화(2014.1.1일부터)
- **[목적]**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 방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 공급**
-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로 **구분·운영**

〈유기가공식품 인증제/표시제 비교〉

제도	소관	주요내용	표지	근거법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 원료를 사용하고 인증을 받아야 ‘유기’ 표시 가능 (국내 인증 표시 사용 가능)		식품산업진흥법('08년 도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3.6월부터)
표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 원료를 사용한 경우 업체 자율적으로 ‘유기’ 표시 (인증마크 사용은 불가)	없음	식품위생법 ('00년 도입)

- **[개선]** 소비자 혼란 방지, 체계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제’ 폐지, ‘인증제’ 만 존치**

주요내용

-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여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 획득**
- 다만,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한 경우**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

-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 가공식품 원료 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 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 하여, 외국 인증을 받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2013.11.1부터 시행)
- 2013.12.31일까지 표시제에 의하여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0월 소비자동향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10월 28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10월 소비자동향 조사」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 중 106, 전월대비 4p 상승**

〈구성지수의 기여도〉

구 분	13.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심리지수 ¹⁾	102	104	102	104	105	105	105	102	106
(전기 대비 지수차) ²⁾	△0.6	2.5	△2.1	2.1	0.7	△0.2	0.2	△2.9	4.2
구 성 지 수의 기 여도 (p)	현재생활형편	0.2	0.2	0.0	0.3	0.0	0.5	△0.5	0.5
	생활형편전망	0.0	0.4	△0.2	0.2	0.4	△0.2	△0.2	0.6
	가계수입전망	△0.7	0.4	△0.3	0.0	0.0	0.0	0.0	0.7
	소비지출전망	△0.3	0.9	△1.2	0.3	0.0	△0.3	1.2	1.2
	현재경기판단	0.2	0.3	0.1	0.4	0.3	0.0	△0.1	0.3
	향후경기전망	0.0	0.3	△0.5	0.9	0.0	△0.2	△0.2	0.4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 [생활형편전망CSI]는 각각 전월대비 2p, 4p 상승**

※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 **[가계수입전망CSI], [소비지출전망CSI]는 각각 전월대비 4p씩 상승**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구 분	'13.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A)	10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¹⁾	89	90	90	91	91	93	91	89	91	(+2)
생활형편전망CSI ²⁾	96	98	97	98	100	99	98	95	99	(+4)
가계수입전망CSI ²⁾	99	100	99	99	99	99	99	97	101	(+4)
소비지출전망CSI ²⁾	106	109	105	106	106	105	109	105	109	(+4)

주: 1)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2)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 84, 전월대비 7p 상승
- [향후경기전망CSI] 95, 전월대비 2p 하락
- [취업기회전망CSI] 93, 전월대비 2p 하락
- [물가수준전망CSI] 138, 전월대비 6p 하락
- [금리수준전망CSI] 100, 전월대비 3p 상승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구 분	'13.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A)	10월(B)	(B-A)
현재경기판단CSI1)	69	73	74	79	82	82	81	77	84	(+7)
향후경기전망CSI2)	90	93	88	97	95	93	93	97	95	(△2)
취업기회전망CSI2)	90	93	90	94	96	92	91	95	93	(△2)
물가수준전망CSI	137	138	136	135	132	133	138	144	138	(△6)
금리수준전망CSI2)	90	94	85	84	90	100	98	97	10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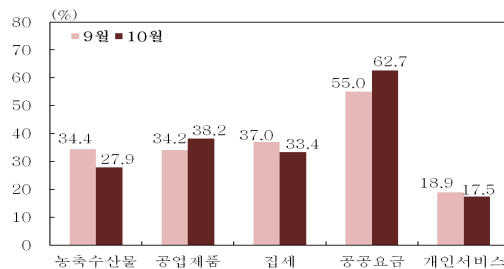
주: 1)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2)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 2.9%, 전월 동일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된 품목에 대하여 공공요금(62.7%), 공업제품(38.2%), 집세(33.4%), 농축수산물(27.9%) 순으로 응답

<기대형성 요인에 대한 응답비중>



기획정보

농업농촌 관련 주요 지표 동향

※ 본 자료는 다양한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동향분석실에서 작성한 것임.
※ 농림수산물 총예산을 제외한 전 지표는 2012년 기준임(농업부가가치는 추정치).

□ 예산 및 생산액

- [농림수산물 총예산] 18조 3,862억 원, 전년(18조 1,323억 원)대비 1.4% 증가
 -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3.2%, 국가 전체예산액의 연평균 증가율 (5.6%) 보다 낮은 성장세
 -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물 비중) 지속적인 감소 추세
 - ※ ('05) 6.6% → ('09) 5.9 → ('13) 5.4
- [농업생산액] 44조 3,003억 원, 전년(43조 3,582억 원)대비 7.1% 증가
 - (부문별 생산액) 축잡업(160,937억 원) > 채소(101,537) > 식량작물(97,507) > 특용기타(46,846) > 과실(38,177)
 - ※ 부문별 성장률: 채소(19.0%) > 축잡업(7.0) > 과실(3.9) > 식량작물(3.0) > 특용기타(-3.5)
 - (생산액 비중 5대 품목) 쌀(18.3%) > 돼지(12.1) > 한우(7.4) > 닭(4.7) > 우유(4.5), 전체 농업생산액의 47.0% 해당
- [농업부가가치] 25조 229억 원, 전년(24조 7,286억 원)대비 1.2% 증가 전망
 - (국내 총부가가치 중 농업 비중) '05년 2.6% → '12년 2.0% 감소
 - (감소원인) 농업은 정체상태이나 제조업 등 타 산업 부문이 농업에 비해 급격히 성장한데 기인
 - (농업생산과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한 농림수산업 전체 부가가치)
 - '10년 95.7조 원, 국내 총부가가치의 8.3% 수준
 - ※ 농업 생산과 관련이 있는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 투입재산업, 농산물가공 및 유통산업, 서비스 및 지식산업 등을 말함.

- 농림업생산액... 일정기간(1년)에 생산된 품목을 금액으로 나타낸 수치로 각 품목에 대해 전국 생산량과 전국 평균 농가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
 - ※ 활용도: 연도별 농림업 생산동향 및 품목별 생산현황 등을 파악, 농림업 부가가치 산출 시 총산출 추계 자료로 활용
- 부가가치... 생산 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총산출-중간소비)
 - ※ 활용도: 국내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으로 농림업이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파악 가능

□ 농가경제

○ [농가교역조건지수(2010=100)] 117.5, 전년(104.0)대비 9.2% 증가

- (2005년 이후 추이) 채산성 회복세 지속
※ ('05) 92.5 → ('09) 93.4 → ('12) 117.5

○ [농가경제수지] 114.2, 전년(108.0)대비 5.7% 증가

- (2005년 이후 추이) 농가경제 흑자 상태 유지
※ ('05) 114.5 → ('09) 116.0 → ('12) 114.2

○ [농가소득] 3,130만 원, 전년(3,103만 원)대비 3.8% 증가

- (2005년 이후 추이) 소폭 상승
※ ('05) 3,050만 원 → ('09) 3,081 → ('12) 3,130
- (세대별) 40~50대 젊은 경영주의 농가소득은 47~48백만 원 수준으로 60대 이상 고령농가에 비해 월등히 높음.
※ (40대) 4,793만 원 > (50대) 4,653 > (60대) > 3,360 (70대 이상) 2,199
- (영농형태별) 축산(4,666만원) > 과수(3,226) > 화훼(3,223) > 채소(2,692) > 특용작물(2,406) > 논벼(1,960) > 밭작물(1,637)

○ [농가부채] 2,726만 원, 전년(2,604만 원)대비 4.7% 증가

- (2008년 이후 추이) 소폭 증가 추세
※ ('08) 2,579만 원 → ('10) 2,72 → ('12) 2,726
- (농업용) 1,312만 원(구성비: 48.1%), 전년(1,189만 원)대비 10.4% 증가
- (영농형태별) 축산(10,277만 원) > 특용작물(8,119) > 화훼(5,299) > 과수(2,395) > 채소(1,958) > 논벼(1,350) > 밭작물(1,009)

○ [부채상환능력] 농업용 부채증가로 부채가 소폭 증가 하였으나 자산 증가가 이를 상회하여 부채상환능력은 개선 추세

- (자산대비부채비율(장기상환능력)) 6.68%, 전년(6.72%)대비 0.04%p 감소
※ ('05) 9.1% → ('09) 7.3 → ('12) 6.7
- (당좌자산대비부채비율(단기상환능력)) 29.5%, 전년(30.3%)대비 0.8%p 감소
※ ('05) 50.1% → ('09) 41.4 → ('12) 29.6

○ [도농간 소득격차] 도시근로자가구소득(53,908천 원) 대비 57.6% 수준

- (2005년 이후 추이) 급격한 확대 추세
※ ('05) 78.2% → ('09) 66.6 → ('12) 57.6
- (1인당 소득) 도시근로자 대비 75.8%

○ [지니계수] 0.429, 전년(0.424)대비 1.2% 상승

- (2005년 이후 추이) 농가 간 불평등도 심화 추세
※ ('05) 0.392 → ('09) 0.407 → ('12) 0.424

- 농가교역조건지수...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자재 또는 생활용품의 가격상승폭을 비교하여 농가의 채산성을 따지기 위한 지표
※ 100 이상: 농산물가격상승률 > 농가구입물품가격상승률 ⇒ 채산성 호전
※ 100 이하: 농산물가격상승률 < 농가구입물품가격상승률 ⇒ 채산성 악화
- 농가경제수지...1년간 농가의 경제활동 결과에 의한 농가소득 대비 가계비의 비율로서 농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
-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농가부채...농가가 타인자본을 차용한 금액, 농가부채관련 통계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활용
- 부채상환능력...농가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장기 및 단기상환능력지표로 구성
- 자산대비부채비율(장기상환능력)...금융자산과 농지 등 고정자산까지 합한 총자산과 부채를 비교한 수치, 장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 당좌자산대비부채비율(단기상환능력)...현금, 예금, 미수금 등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비교한 수치, 농가가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 지니계수...전체가구(인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계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의미

□ 농촌생활

○ [농가 수] 1,151천 호, 2005년(1,273천 호)대비 9.58% 감소

- (농가인구) 2,912천 명, 2005년(1,273천 호)대비 15.2% 감소
- (고령화율) 33.7%, 2005년(29.1%)대비 4.6%p 증가
- (농가인구비중, 2010년 기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 한국 6.2%, 일본 2.1, 프랑스 2.0, 독일 1.6, 미국 1.7

- **[귀농·귀촌가구]** 27,008호, 전년(10,503호)대비 15% 증가
 - (2005년 이후 추이) 베이비부머('55~' 63년생)의 은퇴와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민의 증가로 최근 급증세
 - ※ ('05) 1,240호 → ('09) 4,080 → ('12) 27,008
- **[농촌임료금]** 남자농업노동임금: 85,482원, 여자농업노동임금: 56,519원, 2005년(남자: 58,955원, 여자: 40,043원)대비 각각 45.5%, 41.2% 증가
 - ※ 남자농업노동임금: ('05) 58,955원 → ('09) 72,185 → ('12) 85,482
 - ※ 여자농업노동임금: ('05) 40,043원 → ('09) 47,032 → ('12) 56,519
- **[농업인 건강보험료 1인당 연간 평균지원액]** 77만 9천 원, 2005년(29만 3천 원)대비 165.9% 증가
 - ※ 1인당 평균지원액: ('05) 293천 원 → ('09) 608 → ('12) 779
- **[농업인안전공제 1인당 공제료]** 83천 원, 2005년(30.3천 원)대비 173.9% 증가
 - ※ 1인당 공제료: ('05) 30.3천 원 → ('09) 78.0 → ('12) 83.0
 - ※ 공제가입률: ('05) 40.2% → ('09) 49.6 → ('12) 54.2

- 농가...경지 10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농촌임료금...133개 지역의 성인 관행 1일 임금(현금 지급액 + 급식물평가액)을 단순 평균해 산출
- 건강보험료 1인당 연간 지원액...농어업인 1인이 연간 경감 및 지원받은 건강보험료 액수를 나타내며, 증가할수록 경감지원혜택이 확대되었음을 의미(농식품부 농어업인 지원 및 복지부 농어촌 지역 경감을 포함한 금액)
- 농업인안전공제 1인당 공제료...(농협 안전공제 총 공제금/가입자 수) 매년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나타내는 지표, 보상수준이 확대될수록 금액 증가

□ 식품소비

- **[엔겔지수]** 1분위(소득하위 20%)는 20.79로 2005년(20.7%)대비 0.09%p 증가, 반면 5분위(소득상위 20%)는 11.59%으로 2005년(12.04%)대비 0.45%p 감소
 - ※ 1분위: ('05) 20.7% → ('09) 19.98 → ('12) 20.79
 - ※ 5분위: ('05) 12.04% → ('09) 11.31 → ('12) 11.59

- **[월평균 식품소비지출(도시 전 가구)]** 249만 원, 2005년(204만 원)대비 22.1% 증가
 - ※ ('05) 204만 원 → ('09) 218 → ('12) 249
- **[식량자급률]** 45.3%, 2005년(50.3%)대비 5%p 감소
 - 98년 57.6% 이후 54%~58%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02년 58.3%까지 상승 후 쌀 생산량 감소 등으로 하락 추세
 - **(곡물자급률)** 23.6%, 2005년(29.4%)대비 5.8%p 감소
 - ※ 사료용 수입증가 등에 따라 하락세
 - **(쌀 자급률)** 86.1%, 2005년(102.0%)대비 15.9%p 감소
 - ※ '11년산 흉작으로 '12년도에는 86.1% 수준에 그침.

- 엔겔지수...가계의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표, 가계의 생활수준 측정에 이용
- 식품소비지출...식료품 + 곡류 + 육류 + 채소/해조류 + 과일류 + 외식 + 기타
- 자급률...곡물류(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등)에 대하여 생산량 대비 소비량의 비율, 자급률이 클수록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많이 된 것으로 해석
 - ※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 식량자급률: 사료 미포함

※ 참고문헌

- 통계청 e-나라지표_www.index.go.kr/egams/index.jsp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원자료
- 통계청_보도자료_「201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2013.4.24)
- 통계청_보도자료_「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2013.4.17)
- 농림축산식품부_보도자료_「'13년 예산 및 기금 15조 4,118억 원 확정」(2013.1.2)
- 농림축산식품부_보도자료_「2012년 농림업 생산액 46조 3,571억원」(2013.8.29)
- 농림축산식품부_「양정자료」(2013.3)
- 한국경제_보도자료_「'못 믿을' 소비자들이 뜯어고친다」(2013.3.3)
- 경향신문보도자료_「식료품값 상승... 저소득층 엔겔지수 8년 만에 최고」(2013.2.26)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0월 28일~11월 1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 하락

- 통계청, 10.31일, ‘2013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가을 배추·무 재배면적은 1만5,095ha, 7,532ha로 전년대비 각각 12.6%, 10.3% 증가해 수확량이 늘어 **가격 하락 우려**. 이는 **지난해 가격급등***에 따른 기대심리와 기상여건 양호 등으로 **재배면적 증가**. 이외 **절임배추 주문량 증가**, **대형매장과의 계약재배로 잡곡 등의 작물에서 가을배추로 전환**, 특히 **고추가 2년 연속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내려가자**, 많은 농가들이 **고추 수확을 중도 포기**하고 가을 무 파종한 탓. 또한 11월부터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주요 김장채소 가격**이 **작년보다 30~40% 하락****. 농협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공급량은 평년보다 9만16만t 많은 155만~162만t**, **건고추도 예년보다 5,000t 많은 11만t** 공급 전망. **마늘** 역시 수요량은 38만t 선이지만 공급량은 47만t에 달해 **초과 공급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 분석. 이처럼 김장철 채소 가격 널뛰기 현상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 공급이 부족하면 비싼 김치 먹어야 하고, 채소 가격이 폭락하면 혈세로 보전해주는 근시안적 대책으로 악순환

※ 배추···2012년 11, 12월 평균 가격(kg당 951원·도매가격)이 2011년(339원) 동기보다 180.5% ↑ ‘배추 파동’ / 가을무···2012년 11, 12월 도매가격(상품)이 kg당 429원으로 전년(328원)보다 130.8% ↑

※ ※ 10.31일, aT집계, 배추 상품 1kg의 전국 평균 도매가격 445원, 전년(748원) 대비 40% ↓, 같은 기간 무 1kg 900원 → 500(44% ↓), 난지마늘 10kg 3만9,900원 → 2만 7,800(30% ↓), 양건고추 60kg 131만 원 → 86만4,000원(34% ↓)

자료 : 경향신문·국민일보·연합뉴스·이데일리·이투데이·파이낸셜SBS(2013.10.31.) / 한국경제·한국일보(2013.11.1.)

□ 밭고정직불제 시행 ‘빨간불’

- 농식품부, 현행 품목특정적인 **밭농업직불제***를 **품목제한 없이 지원하는 고정직불제로 개편하려던 계획**에 **예산당국 반대로** 내년 대상품목 확대는

힘들 듯. ▲농식품부···밭고정직불제 시행에 대비 내년부터 지원대상 품목 채소류 전체로 확대, 2015년까지 시설원예와 과수를 제외한 모든 노지 밭작물로 확대, 겨울철 논에 밭작물을 이모작하는 경우도 직불금 지원. 이에 따라 내년 사업면적 33만6,000ha에 소요예산 1,239억 원 신청. ▲기획재정부···내년 **밭직불제 대상품목과 대상농지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고 **겨울철 논 이모작 지원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해 사업 확대는 물론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밭고정직불제 도입도 불투명**.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2015년 밭고정직불제 시행에 대비한 방향으로 수정·의결되지 않으면 제도시행에 큰 혼선 우려

※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도입, 2014년까지 ‘농작물 생산자를 위한 직불제 시행규정’에 근거해 시범 실시된 후 2015년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 고정직불제로 개편될 예정

※ (취지) 밭직불제를 현행 보리·콩 등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목이 ‘전(田)’인 밭에 대상품목을 재배할 때 1ha당 40만 원 지급하는 방식에서 허용보조 형태가 되도록 품목제한을 해제해 농가소득 안정장치로 활용

자료 : 농민신문(2013.10.30.)

□ 안·중FTA 협상에서 중국의 ‘동식물검역 지역화’ 요구 가능성

- 동식물 검역의 지역화 인정 여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 중국은 이미 다른 나라와의 FTA나 검역 협상을 통해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된 지역에 대해 ‘무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 획득. ▲사례···**뉴질랜드·싱가포르·페루**와의 협정문에 ‘질병 무발생 지역 생산물 수출가능’ **지역화 개념 명시**, 2005년 멕시코, 2007년 남아프리카와 ‘수출 사과 및 배 검역 요구에 관한 협정서’를 잇따라 체결, 우리나라와도 2007년 산둥성에서 생산된 양벚(체리)에 대해 지역화 관철, 특히 세계적으로 식물검역요건이 매우 엄격한 나라 중 하나인 **호주**와 2001.4월부터 10년간의 협상 끝에 2010년 ‘호주에 수출하는 중국 신선 사과의 식물검역요건 의정서’ 정식 체결하는 등 **중국의 지역화 협상 전략은 우리나라에도 큰 위협**. ▲전망···한중은 11월부터 구체적인 개방 품목을 정하는 2단계 FTA 협상 진행, 특히 중국은 동식물 수입 허용 여부를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 단위로 판단하는 ‘지역화’ 강하게 요구

자료 : 농민신문(2013.10.30.)

□ 2013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

- 10.29일, **농식품부 종합국감,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을 놓고** 국회-정부 **이견으로 파행, 서면으로 배포한 주요 현안** 살펴보면 ▲**농지 전용 심각, 대책 시급**...(김춘진 의원) 지난 2003~2012년까지 10년간 무려 17만 855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 이중 우량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9년 여 만에 12.2% 감소, (이운룡 의원) 곡물자급률이 최저치 기록, 농지 보전은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 농지 전용 심사협의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를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 시급. ▲**인력대책 마련**...(신성범 의원) 부족한 농촌 인력문제 해결 위해 농촌 주변 도시와 연계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인력은행에 등록시켜 농촌과 연결하는 사업 추진(농촌인력은행 설치).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실상 ‘식물사태’***...(이운룡 의원) 기준가격을 완화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 사태’인 FTA(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직불제를 농가의 생산비를 보전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강조

※ 농가들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 기준가격 90%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90%를 전부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수입기여도가 반영돼 보전금액 감소, 현재 발동기준 90%인 보전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는 ‘FTA특별법’ 개정안 준비 중이지만 상향조정 하더라도 전체 65개 품목 중 적용 받는 품목은 한우와 송아지만 해당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0.31.)

□ 농지연금...가입 감소, 중도 해지 급증

- 10.2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의 복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농지연금제도와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제도 시행으로 농민들 불만 제기. ▲**주택연금보다 혜택 적고 가입 조건 까다로워 농지연금 가입자 감소, 중도 해지 급증**...올해 농지연금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647명.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가입자 1,291명 밑돌 것으로 전망. (황주홍 의원) **올 9월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수는 2,849명**인데 비해 **해지 또는 철회**는 618명(**해약률 21.7%**), 월지급금 지급

전 약정체결을 취소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가입자 대비 32%가 농지연금 사업 중도 포기. 반면 주택연금 해약률은 7.5%에 불과. (경대수 의원)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고령농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편안 요구. (김춘진 의원) 65세 이상 대상 농가 100만 명 중 8월까지 가입자는 2,826명, **가입요건과 토지평가방법 개선 및 고령농업인들이 처한 현실에 맞게** 제도 운영. ▲**농지임대수탁 사업 수수료율도 유사사업과 비교해 너무 높아**...(황주홍 의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0.3~0.5%인데 이 수수료는 8~12%, 정부가 5%로 낮춘다고 했지만 농업정책금리 수준인 3% 정도 인하 주문

자료 : 농민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3.10.28.)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원점 재검토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인건비	용역 등 조사비	운영비	소계	현지법인 출자	합계
2011	1132	360	128	1620	1488	3108
2012	1010	292	58	1360	-	1360
2013(9월 현재)	660	267	68	995	-	995
합계	2802	919	254	3975	1488	5463

- 농식품부,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 새로운 방향의 장기 전략과제로 추진될 전망. 국제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aT를 통한 미국 내 유통망 확보계획이 실패하면서 곡물 도입도 2011년 1만1,000t 외에는 전무해 현재 이 사업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국제곡물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 현행 방식으로는 **성과 못내 사업타당성 재검토해 사업방식 전면 수정**하기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은 계속 진행, 내년 상반기 새 사업방향 제시할 계획
※ 정부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1784억 원(국비 750억 원) 투입해 국제시장에서 곡물메이저를 거치지 않는 현지 직거래 방식의 유통망 구축해 우리나라의 연간 곡물 수입량 1,400만 가운데 400만 도입하기로 한 사업

자료 : 농민신문(2013.11.1.)

□ 양계 농가, 생산단계 HACCP 인증만으로는 인증 마크 표기 불어

- 계란 생산 농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인증마크 표기 단속**과 관련 **불만**
 - 식약처가 생산 농장만 HACCP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HACCP 인증 마크 표기**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다며 **행정처벌 부과**
 - ※ 지난 9월 식약처는 대형 마트 단속을 통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적발 농가에 대해 행정처벌(영업정지)을 부과한 상황
 - 생산 단계인 농장과 유통가공 단계인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모두 HACCP 인증을 받아야 해당 인증마크 표기 가능
 - 농장만 HACCP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HACCP 인증마크를 표기할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 위배

[양계협회 입장]

- 가축사육단계에 HACCP 인증농가에 대해 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지도 시행하지 않고 **단속만을 앞세워 행정처벌 부과**
- 이로 인해 **농장은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경영 손실**이 발생해 폐업 상황 초래
- 계란은 **타 축종과 달리** 생산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해 농장이 HACCP 인증을 받았다면 **HACCP 인증마크를 사용하는데 위해요소가 유입될 소지가 없다**고 설명

[식약처 입장]

- **HACCP 인증마크 표기 단속**은 올해 들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이전 부터 이뤄져** 온 것
-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생기면서 인증마크 표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 으로** 홍보가 이뤄져 왔으며, **계도기간 등을 거쳐 시행**
- 농장만 HACCP 인증을 받았을 경우 단속 과정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문구 정도는 허용하고 있는 상황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10.28.)

연구 지원 정보_1

유제품류 시장 현황

※ 본 자료는 2013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유제품류 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다양한 제품 개발] 발효유·두유 시장 성장 및 프리미엄 시장화**
- **[우유] 국내 생산 정체** 상태
- **[조제분유·발효유·두유]** 중국시장 진출, 건강 중시 소비트렌드 확산 등으로 최근 들어 **생산 및 소비 증가**
 - ※ 조제분유는 한국 식품 수요가 높은 중국에서 최근 인기

□ 세부 내용

- [조제분유] '10년 전에 비해 12% 생산 감소하였으나 '07년 대비는 오히려 25% 증가
 - ※ 조제분유 생산: ('02) 20.6천 톤 → ('07) 14.6 → ('09) 14.5 → ('10) 14.5 → ('11) 15.2 → ('12) 18.2
 - 출산을 감소, 모유 수유 운동의 확산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산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소비자 맞춤형 제품 출시**로 국내에서 틈새시장을 넓혀 특히 **중국 수출이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도 활력**
 - ※ 국내 시장의 10배인 연간 약 4조 원의 중국 조제분유 시장이 매년 10% 이상 높은 성장세, 중국 조제분유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 전망
 - ※ 조제분유 수출(세계/중국): ('07) 13백만 달러/1.5 → ('08) 24/3 → ('10) 24/8 → ('11) 36/24 → ('12) 57/39
- [발효유] 2009년까지는 생산량이 감소 추세, 최근 **건강 지향적인 소비 트렌드 보편화**로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유에 대한 소비가 **2009년 이후 큰 폭 증가**
 - ※ 발효유 생산: ('02) 540천 톤 → ('07) 485 → ('09) 446 → ('10) 503 → ('11) 522 → ('12) 558

- 기존의 액상, 드링크, 호상 타입 이외에 아이스크림이나 셔벗처럼 얼려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제품** 출시, **유기농무첨가 발효유 등 프리미엄 시장 성장**

○ [두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가, 아침 식사 대용**으로 활용되면서 2009년 이후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 최근 참깨, 곡물, 녹차 등이 첨가된 제품이 점진적으로 시장 확대

※ 두유 생산: ('08) 178천 톤 → ('09) 176 → ('10) 243 → ('11) 289

- 2012년 소매기준 4,600억 원 규모 추정, 검은콩 두유 제품 51.6%, 흰콩 제품 35.7%, 기타 제품 12.6% 차지

- 최근 커피 전문점이나 베이커리 업계 등 **두유 사용 다양화**, 타겟 고객층도 중장년층에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 시장 성장** 기대

※ 두유를 구입하는 이유...‘건강을 위해’(43.4%), ‘단순 음료용’(28.2%)으로, ‘식사대용(21.6%)으로’

※ 두유 구입 시 고려 사항...맛(45.3%), 브랜드(13.1%), 가격(11.1%)

※ 두유를 1주일에 1회 이상 구입한다는 응답은 28%로 우유와 비교할 때 구매 빈도는 크게 저조

○ [원유·시유] 국내 **원유** 생산은 ‘10년 전에 비해 생산량이 17% 감소’하였으나, ‘07 이후로는 비슷한 수준, **시유**의 경우 ‘10년 전과 큰 차이 없이 **안정 상태** 유지

※ 원유 생산: ('02) 254만 톤 → ('07) 219 → ('09) 211 → ('10) 207 → ('11) 189 → ('12) 211

※ 시유 생산: ('02) 166만 톤 → ('07) 170 → ('09) 170 → ('10) 164 → ('11) 162 → ('12) 169

- 2003년부터 원유 생산량 감소한 이유는 수급안정을 위해 2002년부터 **감산 추진**, 두유, 기능성 음료 등 **우유 대체 제품 다양화**

- 우유 소비시장 성숙에 따라 저지방/무지방, 유기농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시장선호 강세**, 향후 씹어 먹는 우유 등 우유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제품개발** 필요

연구 지원 정보_2 전국 농지실거래 가격 정보 제공

※ 본 자료는 2013년 10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정부 3.0, 전국 농지실거래 가격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다! - 귀농귀촌 준비 도시민, 농지 희망 농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주요내용

○ [전국 농지 실거래가격 정보 제공] 11.1일부터 **읍면·동별, 논·밭과수원별 평균가, 최저·최고가** 등 농지 실거래가격 정보를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제공**

※ 그 동안에는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희생농지매입사업, 매입비축사업에서 확보한 자료에 국한하여 해당되는 지역의 정보만 제공

- (제공정보) 읍면·동별, 논·밭과수원별 농지의 평균가격, 최고·최저가격, 거래건수 등, 매 분기별로 자료가 갱신추가

- (농지매매 가능) ‘농지거래 중개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매도·매입 희망 농가의 경우 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게 농지매매 가능

○ [기대효과] **귀농·귀촌 준비하는 도시민**,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소유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

□ 직접적인 효과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희망지역의 농지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있어 **구체적인 귀농·귀촌 계획 수립**

○ [농지를 매도하려는 농지소유자] 농지를 처분할 경우 **얼마에 팔 수 있을 지를 미리 예측**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농지 규모화사업, 매입비축사업, 경영희생농지매입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간 **소통, 개방, 공유, 협력**을 위한 **정부 3.0 추진과제 중 하나**로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